

제2차 여성농어업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보고

2025.12.2.(화) 농어촌정책팀

1.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5.11.27.(목) 14:00~16:00 / 위원회 대회의실
- 참석인원 : 14명(위원 11, 위원회 3*) ※ 참석위원 불임 참조
 - * 김호 위원장, 엄성준 농어촌정책팀장, 김선우 사무관
- 회의결과 : 여특위 의제논의, 차기 회의일자 확정 등(11. 27.)

2. 주요내용

- 의제 통합 논의(3개^① 의제 → 2개 의제로 재편)
 - 기획단에서 논의된 3가지 의제(^①성평등 의식문화 확산, 성평등 정책참여 · 거버넌스 구축, 일 · 가정 양립 실천방안)를 2가지* 의제로 통합 논의
 - * 2개 의제(성평등 의식문화 확산+정책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, 일 · 가정 양립 실천방안)
-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+정책 거버넌스 구축
 - 성평등 교육, 현재 성희롱 · 성평등 예방교육 중심으로 운영, 실질적 인식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
 - 관련 교육을 단발성 교육이 아닌, 상시 교육체계로 전환해야 하며, 마을 단위 · 주민 참여형 교육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견 일치
 - 정책결정 구조에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제기, 이에 정책 설계 단계부터 여성농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진입 경로 확대 필요
 -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내 여성 참여를 강화할 필요성 제기, 또한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 관리체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
 - 광역 · 기초단위 전담부서 설치, 거버넌스를 체계화하여 정책 기획 · 집행 ·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제시됨

□ 여성 농어업인의 일 · 가정 양립 실천방안

① 생애주기별 일 · 가정 양립 문제

- 여성농어업인의 가장 직접적인 정책 수요는 출산 · 육아 · 돌봄 · 가사에서 발생, 이는 청년기(출산육아로 영농중단 위험), 중장년기(농작업과 가족 돌봄 병행), 고령기(건강, 복지 사각지대)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
- 특히, 여성농어업인은 근로자가 아닌 경영주 또는 가족봉사자라는 이유로 기존 육아휴직 · 출산휴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, 농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체계 필요

② 공동급식 · 대체인력 등 돌봄 인프라 부족

- 가사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급식의 확대 필요성이 집중 논의됨
- 공동급식, 단순한 급식 제공 차원이 아니라, 여성농어업인의 일상 노동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
- 따라서, 운영주체 다변화, 재정 지원의 안정화, 유형별 모델 정립, 공공시설과의 연계 활용 등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성 제기됨
- 영농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논의(출산, 질병, 돌봄 등의 사유로 농작업 수행 어려운 상황 발생)

□ 기타 논의

- 여성특위, 정책방향 설정과 조정기능에 집중하고 기획단 또는 워킹그룹은 구체적 과제설계와 검토업무 수행
-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이라는 네이밍을 기획단에서 재논의 바람

3. 향후계획

- 기획단 회의 시(12.18.), 각 의제별 포럼, 연구용역 등 주제 논의
- 제3차 여성특위 전체회의 개최('26.1.15.)